

# 스쿨존 불법주정차 전면금지 2년...광주서 8만건 적발

### 인도까지 점령한 차들에 학생들 도로 위 '위험천만' 보행 운전자들 CCTV 무시...상인들 "주차장 먼저 마련해줘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 이후 단속 시작(2022년 2월 1일) 2년만에 광주지역에서 총 8만 건 넘게 적발됐다.

매일 110대 넘는 차량이 광주지역 스쿨존에서 적발됐고 단속시간(오전 8시-오후 8시)을 고려하면 1시간에 10대 꼴로 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광주시 5개 지자체에 따르면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올해 1월에만 5개 지자체에서 총 2276건이 적발됐다. 1월에 부과된 과태료만 2억 7000만원이 넘는다.

2년 동안 각 지자체별로 보면 동구 8480건, 서구 1만502건, 남구 5427건, 북구 1만8113건, 광산구 3만7724건에 달한다.

각 지자체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공휴일은 물론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에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적발은 꾸준히 되고 있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광주지역 12개 스쿨존에는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

차돼 있었다.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오치초등학교 앞 120여m 스쿨존 왕복 2차로 도로 양 옆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의 줄이 이어졌다. 도로 바닥에 적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무색했다.

오전 10시께 광산구 소촌동 어룡초등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과 맞닿은 인도에도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동구 공동 중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는 주·정차 금지·경인지역 표지판이 붙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기둥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남구 양림동 학강초등학교 주변에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학생들은 도로 가운데로 보행을 하고 있었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학생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다.

서구 서광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방학임에도 일부 학생들이 학교 안팎을 오가고 있었지만 차량



31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오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 여러대가 불법 주정차돼 있다. 같은날 오전 서구 쌍촌동 서광초등학교 주변에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가득했다.



들은 학교 앞 도로 빈곳을 찾아 주차하기 바빴다. 운전자들은 부족한 주차공간 탓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스쿨존에 정차한 최모(29)씨는 "잠깐이면 괜찮을거라 생각해 차를 세워뒀다"고 말했다.

이강호(74)서광초등학교 안전지킴이는 "주변에 주택도 있고 원룸촌이라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충 등 대안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구 예술의거리에서 동명물방을 운영하는 이규상(60)씨는 "등·하굣길 학생들 안전을 위한 단속은 이해하지만, 상권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주차장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하니 오던

손님들이 다 끊긴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2년 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정차 유예 시간은 5분으로 단축됐고 과태료는 최대 13만원이다. /글·사진=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여순사건 희생 장환봉씨 순직공무원 해당 안돼”

### 광주고법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 해당”...유족 패소

여순사건 당시 '좌익'으로 몰려 숨진 고(故) 장환봉(당시 29세·철도기관사)씨에 대해 국민권의위원회는 2022년 '재해 사망공무원'으로 인정(2022년 5월 9일자 광주일보 7면)했지만, 사법부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장씨 유족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인은 1948년 10월 26일 '제주 4·3사건' 진압(토벌) 명령을 거부하고 순천으로 진군한 국군 14

연대에 동조했다는 이유(내란 혐의 등)로 체포돼 처형됐다. 영장도 없이 체포됐고 총살 뒤 주검마저 불태워졌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9년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전신)가 고인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자 2011년 법원에 무죄를 요청하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희생자 중 처음으로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 유족은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

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일방적 폭력에 선행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사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인의 직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다 숨지지 않은 점, 고인이 반란군에 합세한 것으로 오인받아 사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한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15년만에...조선대 등록금 4.9% 인상

### 인상분 전액 장학금·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

조선대가 15년 만에 등록금을 4.90% 인상하기로 했다.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개최한 결과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4.90% 인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학년도 학부 외국인 특별전형과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하되, 수업료는 5.64%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은 2009년 이후 15년만으로 조선대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권구락 기획조정실장이 중심이 된 등심위는 교수, 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총학생회, 외부위원 등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지난 29일까지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조선대는 인상된 등록금의 63.55%를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혁신지원프로그램, 첨단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쓸 방침이다.

등록금 인상으로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정부의 국가 장학금(유형 II)은 교내 장학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조선대가 받는 국가 장학금 II는 22억원 가량, 등록금 인상은 6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선대 관계자는 “그동안 등록금 동결로 하지 못했던 노후 시설 보수, 다양한 학생 프로그램 마련 등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와 광주대, 순천대, 호남대, 동신대 등은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교육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 위촉

### 퇴직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등

전남교육청이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을 위촉한다.

위촉 대상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에 있으며 사안 파악과 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청소년 전문가·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때 사안 조사·전담기구 조

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및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필요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 조사 결과에 대해 진술한다.

위촉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이다.

박경애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으로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검찰, '양복 뇌물 수수' 이상의 합평군수 기소

양복대금을 대납 받은 혐의로 이상의 합평군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지난 31일 이 군수를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군수의 양복 구입비를 대납한 건설업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청탁·계약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챙긴 B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군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수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 맞춤형 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A씨로부터 150만원 상당 양복대금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